

“지방의원 전담 교육기관 세워야”

도의회, 민주 지도부 찾아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예산 확보에 힘 실어달라”

이낙연 당대표, 도의회 건의에 “적극 협조할 것” 답변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균형발전 차원 지원할 것”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중앙정
치권에 지방의원들의 전담 교육기관
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
고 나섰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와 전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성경
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이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송영길·정

청래·한병도·안호영·이원택·윤준
병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정
연수센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
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센터를 설립할
것을 건의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원 60%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개선에 관
한 특별법”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
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
정하고 있는 만큼 전담연수기관 설립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어 “예산절감과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
을 요구했다.
송 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
는 지방자치와 행정수요 변화를 따를
수 없다”며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
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1년도 국가예산에 전북현안사업비
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장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는 사업이 많다”며 “지
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라도 전북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
산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의원들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
요성이 있다”면서 “지방의정연수센터
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서도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전북현안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
다.
김종민 의원과 정청래·송영길 의원
등도 “지방의원연수센터 필요성에 공
감한다”고 밝히고, 이어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성경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요 현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계획 우려 목소리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간담회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
환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
원(정의당·비례대표)은 27일 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도내 운동부
지도자 30여 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
이 참석해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과 고용안정, 그리고 내년 시범운영
예정인 스포츠클럽 전환에 대한 다양
한 논의가 이뤄졌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도교육청이 내
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학교운
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이 실행될 경
우 현장에서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상 대회



에 참가하려면
같은 학교 소속
학생만 구성이
가능해 스포츠
클럽형으로 전
환되면 대회 참
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체육
특기생에 대한 배
려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공간 확보 문제
는 물론 체육특기생의 경우 고도의 훈
련이 필요한데도 일반학생과 함께 운
동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울러 “처우개선 역시 단체협약에
서 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
로계약서의 휴식 시간 포함 9시간 조
건에 비해 발생 많은 문제점들이 있
다”며 “도교육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운동부 지도자는 “타
지역은 운동부 지도자가 무기계약으
로 전환된 사례도 있으나 전북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답
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체
육특기생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학
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 클
럽’으로 전환해 지자체 지원 등 다
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
안”이라고 설명한 뒤 “체육특기생들
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입학이나
전학해야만 하는 상황을 없앨 방안”
이라고 말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무
기계약직 1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
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무수당
이나 성과급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업소 992곳

민주 이원택 의원 “근로보호센터 확충 통해 보호 받도록 해야”

최근 5년간 992
개 업소에서
2,082건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
당근로 행위가 발
생해 청소년 근로
자에 대한 처우개
선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
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근로자는 130만
명으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접수된 청소
년 근로상당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
만8,771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3만2,822건에서 2020년
55,940건으로 최근 3년간 70% 증가했
다.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예방 및 중재, 해결 지원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
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 청소년근로보
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
소년의 근로 사유를 파악해 건강, 진
로상담, 직업교육, 성희롱, 폭행 등 관
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종합서비스 연계 건수는 최
근 3년간 326건에 불과하고, 연계현황
은 2018년 167건에서 2020년 40건으로
75% 감소해 적절한 상담을 통해 관계
기관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점점 및 적발 현황에 따라
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108
개 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992개 업
소에서 2,082건의 부당근로 행위를 적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역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51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미
주지 431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269건, 임금미지급 61건, 연소자증명미
비치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과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는 청소년들이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으로 참고 계속 일한다고 답한 경우가
2016년 65.8%에서 2018년 70.9%로
5.1% 상승했으며, 부당행위 및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를 통해 문제를 완전
히 해결 됐다고 응답한 사례는 47.3%
였고, 문제의 일부 해결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52.7%로 나타나 청
소년근로감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청소년 근로자 대상
부당처우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조차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 청소년근로보
호센터의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
년들이 근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의회, 전북대병원 항의 방문

남원시의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항
의 방문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오후 지
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이
라는 이유를 들어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밝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양희재 남원시
의회의장을 비롯해 시 의원들이 참여
해, 전북대병원을 찾아 전북대 병원장
발인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
하며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규 도의원, 국가자격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



전북도의회 최
영규 의원이 대
표발의한 ‘지방
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
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
구 건의안’이 지
난 23일 본회의

를 통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 등에 송부됐다.
최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544개 중 195개(전체의 36%)는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
었으며, 올해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69회 시험 중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는 시험은 단 3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거주 시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시
험 응시자 중 6개 지역(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과 그 지역의
거주 응시자의 비율이 주요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제는 6개 지역과 그 지역의 응시자
가 거의 절반씩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직업계고 혁신, 협의체 구성하자”

도의회 교육위 ‘인재육성·취업률 제고 토론회’서 지역산업·인력양성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도내 직업계고 취업을 제고와 혁
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지
자체, 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교육자치시연연대가 주관
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으
로 주최하는 ‘전북 직업계고 인재
육성과 취업률 향상,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업계고가 현재 처한 상황
을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이 멀지
만, 오늘 토론회가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
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늘 논
의된 내용이 교육정책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한 전북교육
자치시연연대 공동대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
고, 기초발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정책위원장 이영민 박사가, 토론
자로는 교육위 김경수 부위원장, 김
기욱 이리공고 교장, 전북도 기업지
원관 송주섭 과장, 도교육청 미래인
재과 변완섭 과장이 참여했다.

이영민 박사는 기초발제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가 처한 구조적 문
제점으로 ‘지역산업과 인력양성의
미스매치’, ‘전통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 ‘인재양성 혁신 결여’, ‘지
역산업의 인재 흡수 미흡으로 인
한 인재 유출’, ‘공업, 상업 중심
의 인재양성’을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의 매칭성 강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학교밖 중도 탈락
학생 직업교육, 직업교육 희망자
전원 수용 제도 확립’,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교
원역량 재구조화’, ‘기술능력 향상과
함께 인적·사회적 역량 강화
필요’, ‘디지털 유망성 역량 배양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회로 나선 김경수 교육위원
회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활성화
를 위한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직
업계고 약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
해서는 교육거버넌스 측면에서 집
근이 필요하며 지자체, 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기욱 이리공고 교장은 직업계
고의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바라
 봐 줄 것을 요청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
고에 대한 선호도 개선이 필요하
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적이
안 돼서 가는 학교라는 인식을 바
 꾸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학교가 먼저 변화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변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 강화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개인적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동안 청년일자리 정책을 비롯
한 직업교육정책이 대학생 중심으
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1년 전북도 종합계획
을 새롭게 구상하는 중에 있어 직
업계고 육성방안이 포함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두세훈 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
하지 않은 보험약관으로 실효성이 유
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자연재
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
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초
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
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
으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보험료할증
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
입 능력이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과
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1월 농작물재해보험 피
해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다면 70%



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
도 수령 실적이
없다면 50%의 피
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
다”며 “이마저도
10~40%의 자기
부담비율을 제외
하면 실질적 보상
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초와 기후변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대
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
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재난지원
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원을 허
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의원은 “다원적 보정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
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시급한 제도 개
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화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박용근 도의원 발의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
원회, 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화훼산업 진흥에 필
요한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화훼산업 박람회 등 필요한 경
우 예산 지원,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
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지자체 기준 전국대



비 전북도의 화
훼재배농가와 재
배시설 비중은
각각 2.6%, 8.1%
감소했고, 지난
2010년 2400만 달
러에 육박했던
도내 화훼류 수
출액도 170만 달
러로 크게 감소했
다”며 “전북 화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조례 제
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
쳐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유호상 기자